



문재인 정부 6개월, 촛불 과제 해결 2%!

문재인이 촛불 염원 외면하자 우파가 준동하기 시작하다

민주노총의
청와대 만찬
불참 논란

3면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출범

12면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일자리 로드맵

6~7면

박근혜 퇴진
촛불 1년

4~5면

국제
카탈루냐 독립운동,
독일 총선, 일본 총선

5, 9, 10, 11면

탈핵 공약에서
후퇴한 문재인 정부

2면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실상
기간제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8, 9면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장호중** 기자가 개정 증보한 글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상징적 표현인 ‘탈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말고는 어떤 식으로도 구체적인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미 집권 한 달 만에 이런 공약에서도 슬금슬금 물러서느라 바빴다.

문재인은 신고리 5·6호기 폐쇄 결정을 자신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당시 발표했다. 이는 겉보기에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알뜰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342만 명의 견해를 뒤집고 고작 수백 명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꼴이니 말이다.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발표를 듣고 낙담한 밀양 할머니들. 밀양은 신고리 5·6호기에서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이 건설되는 곳이다

심지어 이는 핵산업계와 핵발전 친화적인 인사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사실상 탈핵 공약을 뒤집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핵발전을 미화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에만

매년 수백억 원을 쓰는 자들이 현실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됐지만 아직 가동되

고 있지는 않은 이들 ‘신규’ 핵발전소 세 기의 용량은 폐쇄된 고리 1호기의 일곱 곱절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도 핵발전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이 정말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자 했다면 ‘공론화’는 전혀 필요치 않은 절차였다. 그러나 우파와 타협하면서도 지지자들을 붙들어 두는 데는 효과적인 절차였다. ‘공론화’는 다른 신규 핵발전소 3기 가동을 기정사실화한 직후에 이뤄진 조치이므로, 탈핵·찬핵 진영이 공론화에 참여한다면 ‘탈핵’ 문제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로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면 설사 공사 중단 결정이 나더라도 우파를 달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공사 재개 결정이 나더라도 ‘공론화’라는 형식에 환상을 가진 탈핵 운동 단체 리더들을 붙들어 두거나 하다 못해 마비시킬 수 있을 터였다. 따라서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고 문재인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싸웠어야 했다.

문재인의 핵발전소 공사 재개 결정은 사드 배치 강행에 이어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반하게 만든 또 하나의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

추첨식 민주주의?

공사 재개 발표 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일부 환경단체 리더들이 돌이켜 보듯 공론화위원회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꼴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민배심원단 500명은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다. 이들은 아무 대표성도 없는 일부 학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공론화 위원들이 2만 명의 여론조사 대상자 중 찬반 비율에 따라 추천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에 따라 시민배심원단 500명은 시작할 때부터 공사 재개 입장이 다수였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지역주민’이나 ‘미래세대’가 더 포함된다고 해서 더 대표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왜 최소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제비뽑기에 맡겨야 할까?

일부 환경운동 리더들의 지적대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4~5년마다 고작 1~2분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의제가 다 쓸모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소비에트는 공장 노동자들, 병사들, 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이뤄졌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받고 아무런 특권도 누리지 않았다. 대표들은 언제나 자신을 선출한 사람들에게 의해 소환될 수 있었다. 혁명 과정에서 의식이 고양된 노동자·병

사들은 소비에트의 중요한 결정에 높은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어떤’ 대의제가 중요하다.

일각의 주장처럼 ‘추첨제’가 민주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더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지지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들 중에서 운동의 리더를 선출하고 검증받는 과정도 불가피하다.

국가나 기업처럼 잘 조직된 상대에 맞서 싸우려면 운동도 일정한 집중성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공론화’처럼 추첨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완전히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시대에도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이 정신적 생산수단도 통제한다.”(《독일 이데올로기》)

따라서 대중이 지배계급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질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계급 투쟁과 연결된 아래로부터의 탈핵 운동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를 고작 몇 사람의 환경운동가들의 며칠간 합숙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착각이다.

이 점에서 일부 환경운동 리더들이 아래로부터의 운동 건설보다 소수 활동가들의 활동, 그중에서도 정부 기구나 위원회 참여 등을 더 중요하게 여겨 온 것을 반성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직시해야

문재인 정부에 친화적인 일부 환경운동 리더들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못본 체하며 오히려 공론화위원회를 민주적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큰 문제였다.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을 “존중”할수록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환경운동 리더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날카롭게 가로지르는 계급 문제를 무시하고 ‘시민적’ 대안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계급 문제를 보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시민) 다수의 견해를 대변한다는 중립적 국가관이 나, 자본주의 국가를 우회해 시민사회의 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자율주의적 국가관을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국가는 계급으로 나뉜 사회에서 우회할 수도 중립적일 수도 없는 지배계급의 핵심 기구다. 그 국가의 집행권자는 지배계급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계급적 기반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탈핵’이 매우 희박한 선택지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보수 언론들은 ‘핵발전소 포기는 군사적 핵 이용 기술 포기를 뜻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는데 이는 문재인 ‘탈핵’ 공약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든 것이었다. 특히, 점증하는 동북아 위기 상황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기로 선택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에도 핵잠수함 배치 등 군사적 핵 이용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전임 민주당 정부들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하다가 IAEA의 특별 사찰을 받았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인 국가의 집행권자로서 ‘탈핵’ 과정에서 생길 경제적 부담을 기업들에게 지우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탈핵 운동

한편,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탈핵 운동 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나 원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해 일부 단체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나 주요 환경운동 단체들을 포함한 일부는 자신들이 참여한 ‘공론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른 많은 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단호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아무 효력도 없다!)를 들어 ‘원전 축소는 대세’라는 식으로 현실을 회피하려 한 단체들도 있다.

다행히 이런 입장을 취한 단체들 대부분이 며칠 지나지 않아 공론화위원회의 절차와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문재인이 마지막 기대도 저버리고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결정하자 실망과 분노가 커진 듯하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배신을 직시하고 아래로부터의 탈핵 운동을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또 이 운동이 진정한 사회적 힘을 발휘하려면 노동계급을 참여시키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탈핵 운동이 초계급적 대안에 이끌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낼 것이다. 예컨대 탈핵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혹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입장으로는 진정한 대중 운동을 조직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민주노총은 10월 24일 문재인인의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 불참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진정성 있는 간담회보다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만찬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일부 산별과 사업장을 선별 접촉해 만찬에 초청하는 방식을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두고 노동운동 안팎의 온건 개혁 진영에서는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뚜렷한 명분 없이 대화의 물꼬를 틀 기회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보건의료노조도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엄중한 내부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인의 노동계 초청 간담회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필요를 강조하고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이 배석한 것이나, 하다못해 만찬 메뉴(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까지 청와대는 이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책임 있는 노정교섭”을 요구해 온 민주노총의 바람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청와대가 일부 산별과 사업장을 선별 접촉하고 초청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은 단지 “의전” 상의 문제(《경향신문》 10월 25일자 사설의 표현)가 아니다.

분란 조장하는 청와대

청와대는 만찬 초청 대상도 사회적 대화와 정규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선정했다. 가령 청와대는 “SK 하이닉스 노조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처우 개선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어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SK 하이닉스 노사 합의(2015년)는 이른바 “임금 공유제”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분의 10퍼센트를 떼어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복지에 쓰기로 한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노사



정규직 양보를 압박하려는 정부의 만찬 이벤트를 거부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옳다 건배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문재인

정위는 이 사례를 적극 띄우며 노동계약을 정당화하고 정규직 양보를 압박하는 데 이용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또한, 민주노총의 반대를 거슬러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가운데 오로지 보건의료노조만을 초청 대상으로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사회적 대타협”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만찬 당일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일자리 대타협을 위한 “임금 인상 자제” 방침을 재확인했다(기자회견). 만찬 참석이 불발된 이후에는 성명을 내어, “이[만찬] 자리를 빌어 ...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계획”했었다고 밝혔다.

본지가 이미 다뤘듯이(‘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223호), 문재인 정부가 노사정위 재가동을 위해 노동운동 내부를 선별 접촉하고 내분을 일으키는 등 헤집기를 불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지난 9월 13일 전기련(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에 만남을 제의했다가, 전기련 측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자 만남 추진을 취소했다. 이것은 노사정위가 전기

련 만남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노사정위 재가동 분위기 조성에 이용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전기련은 내부 분란을 겪었다.

청와대는 사회적 대화가 마치 약자를 위한 강자의 양보를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자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또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규직이 도와 달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자신이었다. 그리고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기련의 주장을 결코 지지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도 사회적 대화 자리에서 양보할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 차별받아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은 지나친 욕심이 된다. 이것이 ‘사회적 대화’의 논리다.

노동자 투쟁은 비록 순간일지라도 진실을 밝히 드러낸다. 전기련에 이어 이 진실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었다.

청와대는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델을 모범 사례로 선정(해

설지하철노조를 만찬 대상에 선정)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규직화 방안을 노사 합의로 떠넘긴 결과, 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은 가로막힐 위험에 처했다(본지 225호 기사 ‘서울지하철 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참고).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 체 10월 24일 성명).

정부 책임 회피하는 알리바이

아마도 문재인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한 이후 그 탄력을 이용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10월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과정은 사회적 대화가 공약을 파기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유용한 알리바이이고, 그에 반대하는 운동을 마비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를 사이드 스텝으로 피하면서, 이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또는 타협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취임 이후 노동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시행하라고 누누이 촉구했다.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행정해석 폐기나 공무원노조·전교조 합법화,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해제 등이 그런 사례다.

이런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또,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비판해 온 것도 옳다.

물론 힘의 기울기는 단지 노사정 대화나 노정 대화나 또는 1대 2(노 대 정부·사측)나 1대 1(노 대 정)이나에서 비롯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국가를 운영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해 온 자들과 그들에게 빼앗기고 피해를 입어 온 사람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는 힘들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압박하는 힘도, 정부가 노동자들의 진정한 요구에 귀 기울이도록 만드는 힘도 모두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에서만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방한 반대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

노사정위 재가동이 청와대가 내놓고 강조한 만찬의 목적이었다면,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2주 뒤 바로 그 만찬 장소에 트럼프가 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존중과 개혁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지정학적 전선(한반도 관련 대외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을 눈 감도록 만들고 싶을 것이다.

문재인인의 노동 분야 정책은 양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상당한 반면, 지정학적 전선에서의 후퇴는 훨씬 선명하고 따라서 실망과 이반도 크다. 문재인은 이런 불균형을 이용해,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트럼프 환영과 협력은 우파를 고무하고, 이것은 국내 정치의 지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조건 같은 경제적 쟁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매우 협소한 접근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적폐 청산뿐 아니라 트럼프(제국주의의 상징) 방한 반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조합원들이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참가하도록 조직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민주노총 내 온건파들은 주로 정규직 투쟁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경제주의(조합주의)’를 비판해 왔다. 그 비판이 진지한 것이었는지는

그들이 트럼프 방한 반대에 조합원들을 동참시키고자 얼마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느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좌파의 다수는 제국주의 문제를 경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기 (정치)단체 차원에서는 단순히 선전으로 때우면서 말이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자 애써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트럼프 방한 반대와 한반도 평화 운동에 많이 참가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어 일터의 경제 투쟁도 더 잘하게 되는 상호 작용의 고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 1년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내다

최영준 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크고 중요한 거리 운동의 하나였다. 다섯 달간 이어진 주말 촛불 집회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다.

무엇보다 대중 스스로 투쟁해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쳐) 박근혜를 권좌에서 쫓아냈다. 1960년 4월 혁명 이후 56년 만에 대통령이 민중의 힘에 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고 곧 구속됐다. 주요 정권 실세들과 삼성 이재용 등도 구속됐다.

운동은 이런 가시적 성과뿐 아니라 대중의 의식과 조직에도 퇴적물을 남겼다. 촛불 참가자들이 “광장에서 함께 느낀 벅찬 감정은 ‘승리’의 경험과 합쳐”져 “가능성, 자신감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 등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59.5퍼센트였다.

노동자들이 퇴진 촛불의 초기 견인차 구실을 했다. 덕분에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10만여 명 늘었고 그중 비정규직 조합원이 3만여 명에 이른다.

퇴진 운동의 건설을 좌파 진영이 발의하고 주동성을 발휘한 것을 감안하면, 우파 정권에 정면으로 맞섰던 이 운동이 승리를 거둔 것의 의미는 남다르다.

퇴진 촛불은 허공에서 타오른 게 아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첫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주최한 것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였다. 이른바 최순실의 태블릿PC가 보도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였다.

좌파 진영이 박근혜 퇴진 요구를 채택해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며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자연대’가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제안해 시작된 촛불 집회는 즉시 거리 운동으로 발전해 박근혜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우파 정부의 반노동·반민중적 반동에 맞서 노동단체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노와 저항의 초점 구실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퇴진 촛불 초기에 온건진보파들은 박근혜 퇴진을 내걸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노동단체와 좌파진영의 신속한 초기 노력 덕분에 박근혜 퇴진 촛불은 첫날 청계천광장에서 3만여 명으로 시작한 지 겨우 2주 만에 경복궁부터 남대문까지를 뒤덮는 130만 촛불 집회로 성장했다. 특히, 11월 12일 민주노총 주도의 민중총궐기 시위가 대중 운동 분출의 기점이 됐다.

이런 비약적 성장은 박근혜 퇴진 촛불이 경제 위기와 불평등, 세월호 참사, 전방위적인 노동개악 시도 등에 대한 불만과 저항으로 터져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에도 퇴진 촛불 직전까지 “노동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변화의 진정한 동력이 대중 투쟁에 있음을 보여 준 박근혜 퇴진 촛불

9월 현재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최대 수치”(〈매일노동뉴스〉)였다.

이런 투쟁들 속에서 정치 의식의 진보화가 이뤄졌고 마침내 박근혜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런 변화 덕분에 한편에서는 분노가, 한편에서는 싸워 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빠르게 자라났다.

이 운동이 ‘정치적 지도’(실제로는 노동운동과 좌파의 주도력을 가리키는 용도로 쓰인다)와 대립했던 것인 양하는 주장은 상황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촛불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좌파단체들에 거부감을 보이기는커녕 처음부터 큰 신뢰를 보였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했고, 총파업



사건 사진 제공: 진보연대

호소에 연호했다. 이 점이 2008년 촛불과 매우 다른 점이였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점화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 온 세력들의 의식적인 계획과 대중의 불만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퇴진 요구 채택과 첫 집회 개최, 그리고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의 결

성과 활동까지 박근혜 퇴진 운동 과정은 여러 정치 경향들이 협력 속에서 벌인 치열한 정치적 논쟁과 의식적 선택의 연속이었다.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운동을 안에서 보면 거기에는 운동을 이끌려는 수많은 단체(개인)들의 시도가 들어 있다.”

2008년 촛불과 달랐다

퇴진 운동의 초기 주도 세력뿐 아니라 운동 참가자들의 사회적 구성도 2008년과 달랐다. 이 점이 다른 운동 발전 과정과 다른 결말을 만들어 낸 운동의 핵심 특징들이기도 하다.

참가자의 압도 다수가 노동계급 성원들이었다. 물론 “이번 촛불시위에 가장 많이 참여한 계층이 전문가+상위소득층”이며 월 소득 5백만 원 이상의 “교양 시민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1백만 시위가 벌어진 날 참가자들의 사회적 구성을 보면, 노동자 58.5퍼센트, 대학생·청년 24.5퍼센트, 자영업 16.2퍼센트였다.(〈오마이뉴스〉, ‘100만 집회 참가자 66% “11월 26일에도 간다”’) 청년도 미조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의 다수는 노동계급 소속이었다.

노동자들의 퇴진 운동 대거 참가는 여러모로 고무적이였다. 이는 우파 정권 9년간 추구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노동계급 다수가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이는 또한 고통 전가에 앞장서 싸워 온 조직 노동운동의 위상과 대표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운동은 박근혜의 부패뿐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의 불평등을 광장으로 끄집어냈다.

노동계급이 다수 참가했다고 대중운동의 커다란 장점인 다양성이 훼손되거나 위협받지도 않았다. 자신의 힘에 고무된 노동계급 대중이야말로 진정한 개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장의 촛불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호소에 환호했다. 파업 철도노동자들은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퇴진 운동이 성장하는 상황을 이용해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창원GM비정규직, 이화여대 경비노동자)이 승리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성기업 기업주가 구속됐다. 퇴진 운동 안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요구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12월 초순 국회 탄핵 직전에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계급 고유의 경제적 힘을 발휘하는 수단인) 파업을 벌였다면 폭넓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랬다면 운동에 새로 참가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자극하며 좀더 급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러기는커녕 퇴진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철도 파업이 국회 탄핵초수안 가결 직전에 철도노조 지도부 등 개혁주의자들의 파업 중단 노력으로 종료됐다.

개혁주의

이는 노동자 파업 투쟁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파업이 더 강력해지고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파업 종료를 종용하고, 결국 많은 노조 지도자들도 파업

▶ 5면으로 이어짐

중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을 밀어붙인다는 아베

하필 이 시국에 날아온 나쁜 소식

최마선

10월 22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연립정부가 승리했다. 연립정부에 속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헌법 개정 발의선인 3분의 2를 넘기며 313석을 확보했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 안보관련법 강행 등 집권 5년 동안 군사대국화의 길을 닦아 온 아베는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는 큰 이변이 없다면 2021년 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에 아베는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포기한다고 명시된 헌법 9조 1항과 2항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헌법에 새 조항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한다는 개헌안을 냈다. 그는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자민당 공약에는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개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아베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일본 국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고, 지난해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안보관련법도 제·개정했다. 이 밖에도 교육기본법 개정,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등을 강행하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지지 정당들이 발의선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연립 여당이 다시 한번 개헌 발의선을 돌파한 것은 무척 우려했다.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11월 초 트럼프가 대중국 견제와 대북 압박 공조 강화 등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더욱 걱정된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이 미·일동맹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랐던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선거 직후 트럼프는 아베에게 보낸 축하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승리한 것을 환영했다.

공식 정치의 우경화

〈한겨레〉 등은 일본의 20대 젊은이들의 보수화가 아베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원동력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갈수록 우경화하는 공식 정치와 기층 정서의 간극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선거 전 아베 정권 지지율은 36.9퍼센트로 ‘지지하지 않는다’(46.3퍼센트)를 밀들었다. 개헌 반대 여론도 높았다. 즉, 아베 정권의 이번 승리는 적지 않은 반아베 정서 속에서 거둔 승리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을 찾지 못한 부동층이 40퍼센트가량이나 됐다. 아베 정권에는 반대하지만 5년 전 민주당 정권의 배신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만한 정당을 찾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유신의당’의 일부 세력 등을 흡수해 당명을 민진당으로 바꿨다. 민진당은 최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져 왔다.

중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민진당 지도부는 ‘희망의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희망의당은 도쿄 도지사 코이케가 개혁적 보수를 내걸고 세운 정당이다. 7월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코이케의 지역 정당인 ‘도민퍼스트회’가 자민당에게 참패를 안긴 바 있다. 민진당 의원 다수는 중의원 선거에서 코이케의 인기 기대를 했던 듯하다.

그러나 코이케는 아베 1기 정부에서 방위성 장관을 지낸 우익 인사다. 당연히 개헌도 지지했다. 코이케는 민진당 인사들의 개헌 지지 여부를 확인해 “선별해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진당 내 일부가 희망의당으로의 합류를 거부하고 입헌민주당을 창당했다. 분열로 더



권영민/뉴시스

이 자의 개헌 시도까지 성공해선 안 된다

욱 지리멸렬해진 민진당, 자민당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희망의당은 아베와 다른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번 총선 투표율은 전후 최저 투표율 2위(53.68퍼센트)를 기록할 만큼 낮았다. 일본의 대표적 우파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총선 승리가 아베에 대한 전폭적 지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다시 아베 정권이 오만방자함을 보인다면” 순식간에 민심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활발한 개헌 논의의 시작과 함께 “정중하고 겸허한” 국정 운영을 주문했다.

〈요미우리신문〉조차 인정할 정도로 올해 들어 아베 정권 지지율은 개헌 논의를 밀어붙일 동력이 되기에 역부족이었다. 아베의 사학 비리 스캔들과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공모죄’ 강행으로 정권 지지율이 한때 20퍼센트대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실험으로 지지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자, 아

베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던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아베에게 가뭄 끝에 만난 단비였던 셈이다.

평화운동

일본 평화운동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도 아베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5년 평화운동은 안보관련법 제·개정에 반대해 12만 명이 결집할 정도로 세력을 키웠다. 그러나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 운동의 개혁주의적 지도부는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선거 대응(민주당, 일본공산당, 사민당의 선거 연합 구성)에 집중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 등 개헌 지지 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이런 연이은 좌절로 일본 평화 운동은 자신감을 잃은 듯하다.

일본공산당은 최근 여러 선거에서 약진해 왔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의석을 크게 잃었다(기존 21석에서 12석으로). 옛 민진당의 자유주의 세력과 후보를 단일화하며 선거구 67곳에서 후보를 철회한 것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은 기존 의석을 3배 이상 늘리며 55석을 차지해 제1야당이 됐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다른 정책들은 제쳐 놓더라도) 원칙적으로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회 내에서 일관되게 개헌에 반대해 온 일본공산당의 후퇴는 안타깝다.

일본 개헌 저지는 비단 일본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일본 평화운동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소수일지라도 좌파적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기하며 운동이 조금 더 왼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란다.

▶ 4면에서 이어짐

중단을 지지한 결과인 듯하다.

결국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서히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퇴진운동 안에서도 온건개혁파들이 강화됐다.

그들은 좌파와 노동운동의 초기 주도력을 가져가려는 노력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그들의 온건화 노력은 친박 세력의 반동적 저항과 그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거듭되는 상황 전개 때문에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가령, 12월 10일 촛불 집회에서 나온 한상균 위원장 석방 발언을 문제 삼아 그들은 집회 연단에 노동 관련 발언이 너무 많아 순수 시민 참여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건개혁파들은 퇴진행동이 노동계약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면 우파 측으로부터 역풍이 불고 이는 문

재인 후보의 대선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여긴 듯하다. 그래서 운동이 아래로부터, 특히 계급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느 수준 이하에서 제한하려고 했다.

노동자연대는 온건개혁파들이 민주당과의 공조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동계급의 행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실질적인 적폐 청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과제는 지금도 가장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 자신이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멈춰 달라”고 요청해 이 논쟁은 마무리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철도 파업 마무리 후에는 광장에서 ‘아무 깃발 대잔치’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이 조직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자발적 시민”으로 참가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촛불 초기에 위세를 보여 준 노조가 그런 방식으로 운동 참가자들을 이끌려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운동 초기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광장에서 외치는 것이야말로 광장의 민주주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제한적 태도들이 운동이 참가 대중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제한했다. 운동이 넓어진 만큼 깊어지지 않은 것이다.

운동이 남긴 퇴적물과 혁명적 좌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온건개혁파들은 투쟁의 표적을 “우리 안의 적폐 청산”에 맞추자고 한다. 인권엔지오 지도자인 박진은 “반사회를 찾아가고 노조를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이야기를 나누자.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을 후원하고 독서모임과 영화 모임을 만들자”며 “이제 주어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한다. 도덕주의적이고 개체론적인 발상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때로 그 정부에 맞서 집단적 투쟁을 회피하는 논리로도 이용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혁명적 좌파는 퇴진운동의 효과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실질적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혁명적 좌파가 일터와 대학 캠퍼스에 더 크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 운동의 효과가 계급투쟁을 촉진하는 데에 일부가 될 것이다.

기여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지금 촛

불의 수혜자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그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칭한다. 하지만 지난 반 년 동안 문재인은 적폐 청산의 과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사드 배치처럼 적폐를 늘리고 있다.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은 현 정부와 그 정부의 소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보보다는 더 폭넓고 깊은 변화를 바라고 누릴 자격이 있다. 노동계급 대중이 거대하고 완강하게 행동으로 나설 때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중 행동을 위해 좌파는 개혁주의 세력과 함께 행동하면서도 이들이 행동하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할 때 때로 독자적으로 운동을 구축하고 전진시켜야 한다.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강동훈, 이정원, 장호중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6퍼센트(185만 명가량)로 OECD 평균(21.3퍼센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81만 개를 충원해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로드맵에 따르면, 81만 개 일자리 중 실제 늘어나는 편차는 일자리 30만 개 수준에 불과해 보인다.(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공공기관 신규 채용 6만~8만 명, 간호사 등 보건 인력 3만 1000명 등)

이는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 필요한 자원을 최소화하고 대기업·부유층에는 한사로 회피하면서, 기존 예산 절감이나 자연적 세수 증가에만 의존하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 명 증원 예산을 17조 4000억 원만 배정했다. 17만 명 중 13만 1600명(76퍼센트)을 집권 후반기인 2019~2022년에서야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공무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실제 실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문재인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도 소리만 요란했지 '제로'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로드맵은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

다. 정부가 추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44만 6000명) 중 절반도 안 되는 노동자들만 정규직화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1년에 4만 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3년여간 전환된 규모가 9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민주노총) **(참고, 공공병원 관련 기사는 온라인을 보시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고며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고 내놓은 직무급제는 사실 정규직 임금 역제를 겨냥한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도 임금 삭감을 전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내세운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다를 바 없다.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여전히 모호할 뿐 아니라, 기업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거의 그대로 쫓는 것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복지 확대에서 정부의 책임을 피하려고 내놓은 꼼수에 불과하다.

정부 일자리 로드맵

또다시 간접고용(자회사) 되는 것이 '간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중 이전 정부보다 진전된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인천공항이나 철도처럼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들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공항이나 철

도공사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직접고용 규모를 최소화하려 한다.

인천공항 사측은 간접고용 6800명 중 고자 1000명 정도만 직접고용 하려 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려고 만든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알려져 있다.

철도공사도 간접고용 노동자 9187명 중 1337명(14.5퍼센트)만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 전환 방식의 하나로 제시한 것에서 비롯한 문제다.

충인건비제 제한: 정규직화를 위한 돈을 내놓지 않는 정부

요란한 홍보와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별 볼 일 없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한 톨도 배정하지 않았다. 개별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조처는 충액인건비를 초과한 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 기준을 개선



하는 정도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정원을 늘리거나 인건비를 늘리면 경영평가와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학교 회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인색하게 군 것 도 그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임금'을 명분으로 임금 억제

로드맵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제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최저임금 산업 범위를 조정할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어수봉은 "정기상여,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교통비, 종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또, 로드맵은 '공정임금 체계 확립'도 제시했는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의 직무급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직무급제는 정규직 임금 억제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 격차의 핵심은 비정규직 임금이 형편없이 낮은 데 있는 것이지, 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문재인의 '혁신 성장': 박근혜의 '창조 경제'와 닮은 꼴

로드맵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혁신 성장'을 내세웠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을 강조해 왔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은 성장의 두 바퀴와 같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 성장의 비결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내놨다.

이는 박근혜가 창조 경제를 표방할 때 내세운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떠들썩하게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인 친환경·스마트카,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활용 등은 박근혜가 창조 경제라며 주장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혁신 성장이 전 정부의 창조 경제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내놨다.

임금 삭감을 전제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처들도 내놓았지만, 대선 공약보다 후퇴했다. 68시간 행정 해석 폐기 약속은 사라졌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도 일부만 폐지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임금 감소를 전제하고 있다. 초과근로를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런 조처들은 유연 근무를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이번 일자리 로드맵은 '사람 중심 경제'를 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23쪽 분량의 로드맵 보도자료 중에서 무려 10여 쪽에 걸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병행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육성해, 일자리도 늘리고 보건·주거·에너지 등 사회서비스도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경제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 부담을 줄이고 경제 위기 고통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이명박근혜가 추진했던 정책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명박 정부가 제정했고,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보육, 요양, 간병, 사회복지, 장애인활동지원 등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는 전체의 95퍼센트가 민간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사회적

'규제 완화'의 또 다른 이름 '규제 혁신'

문재인 정부도 기업을 지원해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름은 '규제 혁신'으로 바꿨지만 말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열어 주는 것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된 바 있고,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주들의 규제 폐지 청원을 집대성한 '최순실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다.

이런 무차별한 규제 완화와 날을 가장 끔찍한 미래는 세월호 참사가 가슴에 새겨진 채, 독성 생리대가 보여 준 바 있다.

두 법안의 약명이 자자해 최근 법안을 새로 발의하려 하는 듯한데, 핵심 조처들은 그대로 답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죄값



소방관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 계획을 내놨다. 법정 소방공무원 정원보다도 부족한 인력(1만 9254명)만 채우는 수준이다. 이 증원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지자체들에 맡겨 두지 말고 소방관들이 요구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보건 인력

현재 한국의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5.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에만 최소한 11만 5325명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확충이다.



사회복지 공무원

그동안 복지 대상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증가는 매우 부족했다. 2017년 현재 읍면동 복지 공무원 1인 당 복지 대상자 수는 무려 623명이다. 정부 계획대로 충원이 돼도 복지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는 356명이다.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교사

유치원·특수·영양·상담 교사를 충원하는 계획이다.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사 증원 계획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학급 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교사 6만 명이 필요하고, OECD 상위 수준에 맞추려면 교사 10만 명이 더 필요하다.



경찰, 군부사관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 예방은 경찰력 확대에 가능한 게 아니다. 빈곤과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 군부사관 증원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 강화 정책의 일부다. 경찰·군부사관 증원에 돈을 쓸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인력을 늘려야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5년간 일자리 6만~8만 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당 40~50명 수준이다. 충인건비는 늘리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근로, 연가 휴가비 재원으로 신규 충원하는 방안(탄력적정원제)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임금을 삭감해야 할 공간이 크다.

이런 방법으로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충분히 늘릴 수가 없다. 예컨대, 철도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교대제 개편, 부족한 정원과 인력 확충 등을 위해 6800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서도 제외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워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2만 1000명), 아이돌보미(6만 4000명), 노인돌보미, 장애인 자원, 숲해설사, 생활체육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 개는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 등의 저질 일자리로 채워질 듯하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등으로 17만 명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은 이행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민주노총에 따르면,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당수가 민간 위탁으로 채워질 공산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려면 10조 2000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 고작 28퍼센트만이 무기계약직화 대상

정부는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대부분 무기계약직화이고, 여기에서조차 "전환 예외" 대상이 된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기간제 교사 4만 7000여 명과 비정규직 강사(영어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 5700여 명 전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의 기간제 노동자 상당수와 55세 이상 고령자 등도 배제되고 있다.

이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24만 7000명 중 고작 7만 명(28퍼센트)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때 기간제 노동자 10퍼센트가 무기계약직이 된 것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획기적인 진전인 것은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박성환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이 거의 없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이 2018년 최저임금 16.4퍼센트 인상분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국가기관이 앞장서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기본급이 꽤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는 완전히 날벼락 맞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알맹이가 거의 없음이 드러난 게 얼마 전인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마저 무력화하려는 교육부와 교육청들의 태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학비연대회의는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끝에 정부의 후퇴 강요를 일부 막아 낼 수 있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노동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다. 보전수당을 마련해서 2018년에 한 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임금교섭을 마무리한 것이다. 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을 4만 원으로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일부 만회하게 됐다. 그럼에도 최저임금과 근속수당 모두를 인상하기 바랐던 노동자들 사이에선 상당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노

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손실분을 보전하기로 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관철한 것은 매우 패싸하다. 그것이 다른 부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정부 부문에서 만들어진 선례를 따라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고, 노조 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막아내거나 보전 방안을 강제하기 어려

울 수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후퇴는 이미 예견돼 왔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속도 조절’과 ‘국민 부담 최소’ 운운하며 후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10월 18일에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고정적인 교통비, 중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가

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급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도 명시됐다.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할 수 없음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전기련은 총회를 열어, 결의를 다시 다지고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또,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조로 전환해 가기로 했다.

교육부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도 계속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부 정책에서 비롯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폐지를 위해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고, 교육부에도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갈 것이다.

연대 확대를 위해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 구성도 추진 중이다.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이다.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큰 문제다. 정교사의 결원 기간이 1년인데도 기간제 교사를 6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하거나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학기제 계약을 하는 경우다. 방학을 제외한 학기제 계약으로 3개월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경력이나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생긴다.

교사들은 경력 3년 이상이 되면 1정 연수를 받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호봉도 승급된다. 그런데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1정 연수 기

회를 제한했다.

호봉 승급 시기 제한 문제는 모든 기간제 교사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다. 호봉 승급이 지연돼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성과급, 복지 포인트, 정근수당 지급 차별과 연가나 병가 등의 휴가 부여 차별 등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노조 전환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추진 상황은 어떤가?

정부는 우리와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회원들은 노조로 전환하면 우리의 사용자인 교육부, 교육청에게 더 힘있게 요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연합회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나는 전기련이 전교조에 가입해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는 당장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결국 불가피하게 독자 노조를 추진하게 됐다. 장차 이런 문제를 해결해 함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다.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 행사에 여러 제약을 받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 자격이 정점이 될 것 같다. 교

원노조법은 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들만 교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심지어 범외노조가 될 우려도 있다.

노조 조직을 제고를 말하고 ILO협약 비준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노조 결성 권리조차 제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되면, 노조 결성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위한 공대위 구성 취지는 무엇인가?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의 정규직화 요구가 꽤 큰 반대에 부딪혔다. 정규직화 요구가 정규직 교사, 예비 교사들의 이익과 충돌한다는 것이 큰 쟁점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교원 확대를 함께 요구한다. 그래야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해 갈 수 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는 질 좋은 교육을 원하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대위를 구성해 함께 대응해 가려는 것이다.

또, 공대위를 통해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 결성에 대한 연대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전교조에도 공대위 참가를 제안했다. 전교조 지도부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입장을 제고해 함께해주길 바란다.

지난 몇 개월의 투쟁과 활동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과 교훈은 무엇인가?

이번에 벌어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란은 노동운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다.

학교와 작업장에서 연대를 쌓아 가기 위한 지속적, 일상적 실천이 필요하다. 전교조 내에는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좀더 일찍부터 학교에서,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들 속에서 연대를 조직했다면 전교조 내 의견 분포를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전교조 활동가 100여 명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연서를 발표하며 전교조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래서 이 서명자들에게도 공대위에 참가해 달라고 제안했다. 참가 결정을 내리리라 기대한다.

인터뷰·정리 이정원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박성환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 할 권리를 부정 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요란한 말과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실망을 주고 있다. 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 간단할 일을 특별법 제정으로 하겠다며 꼼수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따라서 일률적으로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거나 인건비 추가 부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특수고용직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며 거들었다. 특정 직종만을 선별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거나 노동3권 보장에 차등을 두는 것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후퇴할 뉘른을 열어제친 것이다. 노동자들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똑같은 약속을 하고도 결국 극히 일부만 선별해 산재보험 적용 등의 개선만 하고 만 선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명목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심지어 일방으로 계약이 해지돼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에 부



특수고용직도 노동자!

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했다.

특수고용직은 IMF 전후로 사용자들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상의 불안정성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참혹한 현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사업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세금 한 톨 내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주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한 보험업계 사용자는 “설계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사가 납부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연간 6037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설계사들의 4대 보험 미가입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취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대다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주’라는 이유로 단체협약도 맺을 수 없다. 설령 업체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별 기업과 노동조건을 놓고 교섭하다 파업을 벌여도 쟁의권을 보장받지 못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리곤 한다.

산재보험도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

다. 예컨대, 건설기계 29개 업종 중 레미콘 노동자들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뿐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무려 2만5000여 명이고 이 중 사망자가 437명(전체 산재 사망자의 45.8퍼센트)에 이른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의 책임과 고통은 온전히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져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바꾸려고 십 수년 동안 온갖 고난을 무릅쓰며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워 왔다. 새로운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속속 노동조합을 조직해 싸움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수고용직은 생산과정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 먹고 사는 명백한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허튼 수작부리지 말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각종 보험 적용, 노동시간 규제, 해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으스대는 기업주들을 타격할 수 있다

“카탈루냐에서 심각한 분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마드리드 주재 영국 대사는 ‘까다로운 것 없는 일’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2017년 10월이 아니라 1640년 5월 이야기다. 위 구절은 존 H 엘리엇의 《카탈루냐 항쟁》에서 인용했다. 당시 카탈루냐에서 일어난 반란이 얼마나 컸는지, 스페인이 지배력을 재확립하기까지 거의 20년간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 책은 그 반란을 다뤘다.

지금 카탈루냐에 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월 22일 영국 주재 스페인 대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의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 결정을 거부하면 “반역 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라호이는 이렇게 말했다.] “카탈루냐인 모두가 [스페인 나머지 지역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도록 일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 안에서, 수백 년 동안 스페인으로 알려진 세계 안에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참가하도록 일할 것이다.” 하지만 라호이의 이런 다짐은 역사적 진실과 다르다.

스페인이 카스티야 왕국을 기초로 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아메리카 대륙과 이베리아 반도에서 민중을 “수백 년 동안” 지배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카탈루냐가 반란을 일으킨 1640년에 포르투갈도 스페인 지배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 독립을 쟁취했다. 당시 카탈루냐는 자치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카스티야 왕조와 화해했다. 그러나 18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르봉 왕조가 들어선 후 이 화해는 파기됐다.

19세기 말 부르봉 왕조는 마지막 남은 해외 식민지(필리핀)를 미국에 뺏기면서 위기를 맞았고, 부르봉 왕조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은 자결권을 요구했다. 1934년 10월 당시 카탈루냐 수반 루이스 콤파니스는 카탈루냐 독립을 선포했다. 콤파니스는 체포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스페인 내전에서 우파가 승리하며 들어선 프란치스코 프랑코 군사독재 치하에서 처형당했다.

경고

이것을 그저 옛날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라. 고작 두어 주 전에 스페인 중앙정부 여당 국민당(PP) 대변인이 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카를레스 푸지데몬에게 [이러다가] 콤파니스와 같은 말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당은 프랑코 군부독재를 정치적으로 계승한 정당이다. 국민당은 죽은 프랑코나 살아있는 국왕 펠리페 6세와 마찬가지로 카스티야 중심주의를 옹호한다.

스페인은 옛 다민족 제국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서도 이제는 단일한 국민국가인 척하는 나라 중 하나다. 서유럽에서는 영국이 가장 중요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사례다.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다.

2007~2008년부터 지속된 경제 위기로 영국과 스페인 모두에서 균열이 더 깊어졌다. 두 나라의 우파적 중앙정부가 시행한 긴축 정책의 경험은 각각 스코틀랜드와 카탈루냐에서 독립 운동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중앙정부는 각자의 독립 운동에 다르게 대응했다. 2014년 9월 영국 보수당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결과는 캐머런의 승리였다(그의 기대보다는 표차가 적었지만).

그러나 캐머런은 노동당을 방어막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노동당은 영연방을 지키려다 스스로 희생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한 스코틀랜드 노동계급의 표 다수가 스코틀랜드국민당(SNP)으로 넘어갔다. 보수당은 가장 일관된 영연방 옹호 정당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지금은 코빈 효과가 잉글랜드 국경을 넘어 스코틀랜드로도 퍼져 나가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반면 라호이는 국민투표라는 도박을 거부했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카탈루냐 독립 찬성 여론이 다수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이에 맞서 투표를 강행했다.

라호이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카스티야 중심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국민당 내에서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다.(프랑코주의자들 사이에서야 말할 것도 없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나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등이 라호이의 강경 노선을 지지한다. 영국 자유주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렇게 으스했다.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 거의 모두가 EU 탈퇴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정상들이 라호이를 지지한 것은] 분리주의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정부의 탄압이 거세지는 것이 카탈루냐에서 대중적 저항 운동을 키우는 불씨가 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쪽은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을 떠나는 프랑코의 후계자들)일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77호 / 번역 김준호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탈루냐 각계 인사 85인의 연대 호소문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아래로부터 행동입니다

편집자 주: 10월 1일 카탈루냐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정부의 공격 속에서 치러진 후, 대중적 카탈루냐 독립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카탈루냐 지역 노동조합 활동가, 자치단체 전현직 기초의원, 시민사회·좌파 단체들의 지도적 활동가 등 각계 인사 85인(10월 18일 현재)이 발표한 국제 연대 호소문으로, 오늘날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밝히는 부분을 번역해 실는다.

10월 1일 카탈루냐인 수백만 명이 자결권을 요구하며 투표했는데도 스페인 중앙정부는 전투경찰 수천 명을 보내 우리를 잔혹하게 공격했습니다. 민중에 대한 이런 경찰 폭력과, 그에 맞서 수십만 명이 단호하고도 민주적인 행동으로 투표소를 평화적으로 지켜 낸 것이야말로 카탈루냐에서 지금 벌어지는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다양한 요구를 내건 세력들이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매우 진보적인 여러 단체들의 강고한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참가 조직들은 진정한 성 평등 정책을 촉구하고 성적 괴롭힘에 반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 강제 퇴거에 반대하고 에너지 빈곤 해소를 요구합니다. 세월가스 개발지하수 오염과 지진 등을 낳는대에 반대합니다. 핵 에너지에 대한 특별세 도입을 요구합니다. 투우 금지를 요구합니다. [전투경찰의] 고무탄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합니다.(이런 요구를 번번이 묵살한 것이 바로 스페인 중앙정부입니다.)

올해 [2월] 카탈루냐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난민 환영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 기사: [스페인 바르셀로나]

“난민 환영”을 외치며 수십만 명이 행진하다] 올해 8월 바르셀로나와 캄브릴스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 공격 직후 [우익의 준동에 맞서] 평화와 공존을 외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행진했습니다.[관련 기사: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격 이후: 극우를 막고자 결집하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그 누구도 카탈루냐를 ‘폐쇄적 민족주의’나 ‘퇴행’이라는 말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카탈루냐 독립에 찬성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카탈루냐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900명 이상이 다칠 정도로 경찰 폭력이 잔혹했음에도 10월 1일 우리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10월 1일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90퍼센트 이상인 2백만 명 이상이 독립 카탈루냐공화국 수립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투표율은 현행 자치법규를 승인한 [2006년] 국민투표 때보다도, 유럽연합 헌법을 승인한 [2005년] 국민투표 때보다도 높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민투표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탄압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시사하는 바는



사진 출처: Roser Vellengas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민주주의, 여성차별, 빈곤, 환경 등 다양한 의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훨씬 더 큼니다. 전체 투표소 2,300곳 중 약 400곳이 경찰과 중앙정부 당국에 의해 폐쇄돼, 유권자 약 77만 명의 권리 행사가 제약당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카탈루냐에 거주했는데도 출생지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스페인 선거법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이 호소문에 서명한 사람 중 몇 명도 그 때문에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투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도 카탈루냐인의 자결권을 지키기 위해 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고, 검찰에 소

환되고, 심지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전투경찰은 카탈루냐 자치정부 건물과 언론사를 습격했고, 웹사이트 약 150개를 폐쇄했습니다. 현재 카탈루냐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 있는데, 프랑코 군사독재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군사독재 치하에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정의도 온전히 세

분수령으로 향하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

스페인 중앙정부의 탄압에 맞서 50만 명이 시위하다

찰리 김버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서면서, 10월 21일(현지 시각) 바르셀로나에서 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애초에 이 시위는 감옥에 갇힌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 요르디 산체스와 요르디 퀴사르트의 석방을 요구하려고 조직됐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가 최근 탄압을 자행하자, 이에 대한 분노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활동가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 관공서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인간 장벽”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학생 단체들은 18~19일 이틀 동안 “우리 모두를 가둘 수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맹휴업에 나섰다.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반자본주의 선거연합 민중연합(CUP)과 연계된 청년 조직 ‘아란’의 대변인 마르 압

뿌르단은 “대중적 비폭력 불복종”을 호소했다.

21일 오전(현지 시각) 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는 카탈루냐 현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6개월 안에 카탈루냐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라호이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폐쇄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의회는 10월 26일에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카탈루냐 의회가 그날 독립 선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라호이는 비상 내각회의를 소집해, 10월 27일 스페인 상원에서 헌법 155조[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발동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라호이가 속한 국민당이 상원 내 다수당이기에 때문에, 라호이는 이날 표결로 자신의 안이 통과될 것이라 보고 있다.

헌법 155조를 발동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수반으로 있는 카탈루냐 현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하고, 중앙정부 산하 유관 부처가 카탈루냐 통치권을 갖게 된다.
-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예결산과 세제 등 재정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카탈루냐의 자치경찰 ‘모소스 데스카드라’를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된다. 현재 복무 중인 자치경찰관을 “중앙정부 산하 치안 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라호이의 계획은 카탈루냐에서 강제로 재선거를 실시해 독립 반대파가 다수당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현재 카탈루냐 의회에서는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이 전체 135석 중 72석을 차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경우가 됐든 스페인 중앙정부가 언론을 상당 부분 장악한 상황에서 치러질 것이다. 반면 언론 노동조합들은 헌법



사진 출처: Roser Vellengas

아래로부터의 단호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155조 발동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보타주야말로 독립 찬성 세력에 대한 가장 큰 압박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은행 등 기업 약 1300곳이 본사를 카탈루냐 밖으로 이전했다.

헌법 155조 발동에 맞선 가장 효과적 대응은 파업과 대중 시위일 것이다. 이윤보다 인간을 우선하는 사회에 대한 전망 속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요 노조연맹 중 최소 세 곳이 참여하는 공동 파업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 출처: Roser Vilabona

"자유! 구속자를 집으로!"

워지지 않은 반면 파시스트들은 수상쩍은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현실은, 스페인 국가 하에서는 민주적 권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독립의 상(象)이 저마다 달라도 카탈루냐 인구의 83퍼센트가 한 목소리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독립을 결정할] 자결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단결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활동을 벌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활동은 인내심 있게 토론하고 모두를 위한 진보적 사회를 건설하는 참여 과정 속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탄압이 승리하고 민주적 권리가 (그리고 십중팔구 사회적 권리도) 제약당하는 상황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오랜 세월

그랬듯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스페인 중앙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강력한 행동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그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민주적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 시민사회는 [스페인 중앙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카탈루냐 민중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합니다. 모든 도시, 모든 나라가 카탈루냐 독립 투쟁에 걸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의 자결권을 탄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일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기본권을 탄압할 것입니다. 카탈루냐의 투쟁은 다수 민중의 민주주의와 정의의 위한 전 지구적 투쟁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카탈루냐에 연대해 주십시오. 번역 김준호

그러나 라호이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 푸지데몬은 “자제”를 호소하며 우물쭈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푸지데몬은 의회를 소집해 라호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해 왔다.

강경

푸지데몬이 한 번 더 유럽연합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것은 완전히 쓸데없는 일이다. 10월 1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카탈루냐 문제를 공식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현 상황에 대한 라호이의 보고를 환대했다. [브렉시트를 놓고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도 라호이 지지를 선언했다. 지금으로서는 거리 시위와 파업으로 운동을 급진화시키고, 카탈루냐와 스페인 전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노동계급 조직과 좌파의 연대를 건설하는 것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호이는 도박을 하고 있다. 그는 센 척하고 있지만 보기만큼 세지 않다. 10월 1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산하] 특수경찰 2만여 명을 비롯한 치안 병력을 카탈루냐로 파견했지만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를 막지 못했다. 800명 이상이 부상으로 입원할 정도로 경찰 폭력이 잔혹했지만, 카탈루냐인 43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했고 그중 92퍼센트가 독립을 찬성했다. 민주적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카탈루냐 독립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577호 / 번역 김준호

독일 사회주의자 인터뷰

우경화하는 공식 정치, 좌파 내 논쟁, 혁명가들의 구실

독일 총선 이후 상황에 대해 독일 사회주의자 폴카트 모슬러(사진)를 김종환 기자가 인터뷰했다. 그는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좌파’라는 뜻) 내 의견그룹 ‘마르크스 21’의 지도적 회원이다.

독일 선거 결과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와 맞물리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올해 여름과 비교하더라도 유럽의 정치 양극화 경향은 더욱 강해진 듯하다. 독일 선거에서 나타난 우경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범죄파 정당들(디링케, 사민당, 녹색당)의 득표가 전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자본가 정당과 우파 정당의 득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둘째, 우파 진영 내에서도 우경화가 있다. 기민당은 1949년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반면 인종차별적 우익과 파시스트가 섞여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득표가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정부 정서, 특히 메르켈에 대한 반대 정서가 두드러졌다. AfD는 선거 기간 내내 “메르켈을 쫓아내야 한다”고 외치며 반정부 정서를 이용했고, 중간계급과 하층 노동계급의 표를 끌어당겼다.

파시스트 영향력 커지는 극우 AfD

AfD는 최근 빠르게 더 우경화했다. 선거 직후 AfD 대표가 탈당했는데 당내 더 강경한 우익 세력에 의한 고립을 버티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불법 난민을 총으로 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다.) AfD 안에서 더 강경한 우익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은 가울란트이다. 그는 지독한 인종차별 선동과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행동을 연상시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가울란트는 선거 기간 중 “독일군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백히 당내 온건파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전 대표가 탈당을 했지만 AfD가 약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선거로 국회의원인 94명이나 생긴 만큼(독일 전체 국회의원은 7백 명 남짓) 이제 돈이 있고, 또 수백 명이 AfD에서 상근으로 일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민당 지도자는 “1945년 이후 처음으로 파시스트들이 의회에 앉게 됐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다. 나는 현 상황이 독일 정치의 중요한 균열을 보여준다고 본다. AfD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지난 몇 년간 독일을 강타한 지독한 인종차별, 무슬림 혐오 캠페인이 있다. 이런 악선동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특히 심해졌다. 2010년, 무슬림과 이주민을 비난하는 책 《스스로 파괴되는 독일》은 정부와 언론이 엄청 떠운 덕분에 무려 2백만 부 이상 팔렸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2014년 우익 거리 운동 페기다(‘서방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는 뜻)가 생겨났다. 페기다의 부상은

2013년 창당한 AfD가 더 우경적으로 변모하도록 자극했다. 12월 AfD 당대회에서 파시스트가 지도권을 차지할 듯하다. 우리는 공동전선 ‘인종차별에 맞서자’를 통해 이 대회장 앞에서 대규모 전국 집중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하고 있고, 디링케 지도부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10월 22일 베를린에서도 시위를 준비 중이다. [실제로 1만 2천 명이 AfD 의회 입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좌파당 디링케의 성적과 잠재력

옛 동독 지역에서 디링케는 AfD에게 40만 표를 잃었다. 득표율도 줄었다. 반면 옛 서독 지역에서는 표가 늘었다. 처음으로 디링케 소속 의원이 동독 지역보다 서독 지역에서 더 많이 배출됐다. 디링케는 왜 동독을 잃었는가? 핵심은 디링케가 세 지방정부(베를린, 튀링겐,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연정에 참여하고, 작센 주에서는 기민당을 따라 투표하는 등 ‘책임 있는 정당’이 되는 데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재무장관 쇼이블레가 고속도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3개 주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지난 당대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번 선거 기간 중 디링케에 3천 명이 입당하는 일도 있었다. 옛 동독 지역에서도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운동이 강력한 곳에서는 전진했다. 그런 지역들에서 AfD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득표했다. 의견그룹 ‘마르크스 21’이 개입한 지역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의 쾰른, 뮌스터 시에서는 선거 후에 인종차별과 AfD에 반대하는 행진이 각각 수만 명 규모로 벌어졌다. 이들 지역에서 AfD의 득표율은 5퍼센트 이하였다.

또한 선거 중 베를린에서 보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은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보건 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난민과 터키인 문제’에서 ‘의료 체계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TV에서 메르켈은 의료 문제에 답하라는 질문에 곤경에 처했고, 이런 광경은 다른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했다. 이처럼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의료 체계 등 사회적 쟁점을 제기하며 인종차별·파시즘 반대를 결합시켰고 그것이 효과를 냈다.

좌파 내 인종차별 대응 논쟁

디링케 안에도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난민 문제는 부차적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주민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난민 문제에 관해 일관되게 올바른 입장을 주장하려면 인종차별 쟁점을 회피할 수 없다. ‘먹거리 문제 vs. 이주민 문제’



라는 구도에 빠지는 것은 큰 패착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위기와 복지 축소 사이의 연계는 결코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인종차별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지배자들이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업장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자동으로 인종차별 반대 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좌파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후 일부 지도적 인사들은 심각하게 나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스카 라퐁텐은 이렇게 말했다. “당 지도부는 독일 노동계급이 이제 ‘난민 문제’에 진절머리를 낸다는 것을 무시했고, 실천에서는 사회적 쟁점을 등한시했다.” 그는 2009~2010년에는 디링케를 왼쪽으로 이끈 인물이지만 이제 오른쪽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쟁점에서 앞장서서 반자본주의적 주장을 펼친 일부 극좌파도 이런 주장에 동조한다. 오히려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당내 우파의 입장이 우리 ‘마르크스 21’과 더 비슷하다. 우리는 민영화 등 문제에서는 당내 우파에 맞서 그 좌파들과 함께해야 하고, 인종차별 쟁점에서는 당내 우파와 나란히 인종차별에 반대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있다.

오스트리아

이처럼 인종차별에 관한 급진좌파의 혼란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보인다. [오스트리아 총선 상황에 대해서는 225호 ‘오스트리아 총선: 나치의 정부 입각, 세계에 경고를 보내다’를 보시오.] 오스트리아공산당(KPO) 지도부는 인종차별 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경제 문제만 다룬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산당은 최근 KPO+라는 새로운 세력이 가세하면서 사회당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봄 녹색당 지도부에 의해 제명된 청년 조직이 공산당과 동맹을 맺은 것이다. 모든 주요 대학에 조직이 있는 KPO+를 이끄는 인물은 여성 마르크스주의자이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 리즈 보겔과 러시아 혁명이 레닌에 관심이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공산당 지도부와 급진적인 청년 조직 사이에서 혁명적 좌파는 인종차별 문제도 중요하다는 등 올바른 태도와 개입을 통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NO 트럼프 공동행동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시동이 걸리다

김광일

트럼프가 11월 7일과 8일 한국을 방문한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인 방한을 앞두고 방문 목적과 일정들이 공개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순방을 자신의 대 아시아 정책을 보여 주고,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다질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9월 백악관은 순방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트럼프는 순방 과정에서 대북 압박의 기치도 높일 것이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는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 목적이 “세계가 더 어두운 시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10월 23일치)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아시아 순방을 국제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강화된 대북 압박”을 구축하는 데 이용하겠다고 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일본 방문 때는 아베를 고무하며 일본인 납북자 가족 행사에 참가하고, 중국 방문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시아 순방 중 “유일무이한” 국회 연설 대상국이 한국이라는 것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백악관 측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NO 트럼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운동이 트럼프 방한에 적극 반대해 나서야 할 이유다.

트럼프 방한에 맞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이 ‘NO 트럼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해 트럼프 방한 반대 투쟁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항의를 호소하기 위해 도심 트럼프 방한 반대 펼침막 걸기, 서명 운동, 주요 도심과 대학 홍보전, 작업장 펼침막 걸기, 시국 선언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행동

아울러, 공동행동은 트럼프 방한 반대 대중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1월 4일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방한 반대 대중 집회의 시동을 건다. 한미정상회담과 만찬 등이 예상되는 7일에는 광화문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방한 반대 행동을 하고, 국회 연설이 예상되는 8일에는 “국회 연설 저지”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동행동의 방한 반대 행동에 적극 동참하자.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에서 평화가 절실한 지금,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을 적극 건설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 실현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집회 제목에서 “트럼프 반대”를 뺀다?

온건진보 단체들이 공동행동이 준비하는 11월 7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 제목에서 “트럼프 반대” 문구를 빼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자신들도 7일 집회를 함께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수도 한복판에 있는 그 순간에, 트럼프 반대를 핵심적인 시위 제목에서 빼자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이런 제안은 그날 시위의 타격을 불명료하게 만들고 흐릴 것이다. 그럼으로써 모호한 슬로건을 내걸어, 트럼프를 국민으로 초청하고 국회 연단까지



트럼프는 국민으로 초대받을 이유가 없다

세우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느낄 부담을 덜어 줄 요량인 듯하다.

온건진보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지 있고 선진적인 대중의 섟을 죽이는 것은 대중 투쟁이라는 점에서 손실이다.

또, 앞으로도 온건진보 세력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게 만들 ‘미끄러운 경사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런 손실과 우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제국주의자들과 선진적 노동자들이 집회에 대거 참가해 우렁차게 트럼프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NO 트럼프 공동행동의 트럼프 방한 반대 주요 행동 계획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11월 4일(토) 오후 4시 |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

트럼프 반대 전쟁 반대 촛불행동

11월 7일(화) 오후 7시 | 광화문

트럼프 국회연설 저지 범국민행동

11월 8일(수) 오전 9시 | 국회 앞

※ 트럼프 방한 일정 변경에 따라 시위 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 ★ 철폐연대·비폐세 주최 토론회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내려놓아야 하나?
- ★ 공공병원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 ★ 코레일 소수의 비정규직만 (정규직화도 아닌) 무기계약직화하겠다고?
- ★ 서울지하철 정규직화 투쟁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 ★ 유성권 서울지하철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 ★ 공무원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 ★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 ★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가해자 처벌하라는 노조 요구 정당하다
- ★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또 한 번 좌절되다
- ★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미군 뒷주머니에 몰래 돈 찢러 준 박근혜

박근혜의 죄목이 또 하나 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일조한 증거가 또 나왔다.

10월 중순 <한겨레>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주한미군에 현금 지원을 늘리는 이면 합의를 했다.

당시 한·미 간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안에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 정보를 다루는 특수정보시설(SCIF)”을 짓는데, 한국이 현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설은 중국·북한은 물론 한국 내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데, 한국이 돈을 대지만 한국 정부는 이 시설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했다. 그런데 국회 비준이 필요한 본 협정에 넣지 않고 “이행 약정” 형식으로 별도 합의문을 작성했다. 밀실 이면 합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합의가 기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구조(관행)에 비해 봐도 특별히 부당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토록 비밀스럽게 합의했을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밀실 이면 합의의 흑을 받아 왔다. 모두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 드러난 미군 정보시설 관련 합의도 그 일환이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위험 고조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의 주요 고리인 주한미군의 군사적 강화를 도와 지정학적 위기에 스스로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호전적 한미

동맹 추구야말로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이 거부하고 싶어 한 적폐의 하나였다.

게다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적대적이었던 것에도 미군과 연계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촉진 문제가 있었음이 거의 확인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되돌리려는 커녕 친트럼프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이 정부가 진정 누구를 대변하는지 가늠케 한다.

김문성